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자료(1)**

1.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7
2.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98년도 제2차 학술회의
3.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방안과 수순-대선국면과 차기 정권에서 할 일을 중심으로; 광노현(방송대, 법학교수)
4. 한국에 있어서의 의문사 문제; 차병직(변호사)
5. 박종철 열사와 오늘의 한국 사회 토론 자료집 ; 박종철 출판사 외, 1999
6.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 명단

인권 자료실  
 분류기호  
 B125 44

# 후원단체 및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산화해가신 열사들의 뜻을 기리고 이어나가기 위해 결성된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에서는 후원단체 및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 후원방법
    - 재정후원: 약속하신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자원봉사: 필요한 때에 시간을 내어 도와 주시면 됩니다.
    - 정책, 자료후원: 광고, 전산, 각종 아이디어 등 전문 능력의 후원도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방법
    1. 회원가입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정식 등록이 됩니다.(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2. 아래 신청서 기재란에 해당 사항을 자세히 적어 보내 주십시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42-3180으로 문의 바랍니다.
  - 후원회비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1. 열사정신계승사업 2. 민주화운동명예회복사업 3. 자료발굴 및 발간
    4. 회보발간 5. 유가족 지원 6. 민주화운동 연대사업
  - 회원님께는
    1. 매월 발간되는 열사회보를 보내드립니다.
    2. 열사와 추모사업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시면 보내드립니다.
    3.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4. 후원인의 밤을 개최합니다.
    5. 연대회의와 같은 목적의 사업에 지원, 후원합니다.
    6. 열사회보에 알릴광고를 게재해 드리고 후원인들의 취미동우회를 연결해드립니다.
- ◎ 계좌번호 국민은행 807-21-0395-581 우 체 국 010793-0110240  
 제일은행 159-20-101628 농 협 061-02-119965  
 예금주 윤명선

## 후원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양력, 음력)      성별(남, 여)
소속(직장)				
집 주소	우(    -    )	전화:		
직장 주소	우(    -    )	전화:		
우편물을 받아보실 곳	<input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직장		
가입 방법	<input type="checkbox"/> 정책,자료회원 <input type="checkbox"/>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단체회원			
월 약정액	개인	<input type="checkbox"/> 3천원	<input type="checkbox"/> 3천원 이상(    원)	
	단체	<input type="checkbox"/> 만원	<input type="checkbox"/> 만원 이상(    원)	
회비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은행지로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송금			

# 이 시대는 아직도 열사를 요구하는가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때: 1997. 3. 6. 15:00  
 곳: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주최 :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월간 말, 사회평론 길, 주간 내일신문  
 후원 : 한겨레 신문사,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주관 :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전화742-3180 전송742-3181)

# 이 시대는 아직도 열사를 요구하는가

##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학술세미나 일정

	1차 학술세미나	2차 학술세미나	3차 학술세미나
일시	1997. 3. 6(목) 오후 3시	1997년 6월 초 (시기는 6·10 세미나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	'추모 및 기념 주간' (9월 1일 ~ 7일 사이)
장소	성공회대성당 대회의실		
1주제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이념대립 과정과 민주화운동 (개괄) - 배경, 주체, 운동방식, 국민적 공감대	군사독재정권 시기의 열사·희생자.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열사·희생자 분석 (육중 희생자 포함)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방안 (총괄)
발제자	주1 : 김봉우	주1 : 손호철 주2 : 서준식	주1 : 광노현 주2 : 김봉우
2주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희생자 의미 조명 - 한국적 특수성(역사, 사회, 사상)에 따른 열사의 발생과 명예회복 방안	군사독재정권 시기의 의문사 사회, 법률, 법외학적 측면 명예회복 방안	민주화운동의 향후 과제
발제자	주1 : 김삼웅	주1 : 차병직 주2 : 황상익	주1 : 이창복
토론자	황인성, 장기표, 정병호, 박래군, 손석춘, 김지형	문정현, 천정배, 장임원, 허영춘, 서 훈, 이수인, 권오현, 김삼웅, 박연철, 박래군	윤명선, 황인성, 김삼웅, 천정배, 차병직, 윤명선, 박래군, 이이화, 임수경
비고	전체 기초연설 : 임재경	명단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명단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 차례

• 인사말: 이창복 (추모단체 연대회의 상임의장)

• 기초연설: 임재경 (언론인)

### • 발 제

#### - 1주제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이념대립 과정과 민주화운동'

- 배경, 주체, 운동방식, 국민적 공감대 등  
주제 발표 :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 2주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희생자 의미 조명'

- 한국적 특수성(역사, 사회, 사상)에 따른 열사의 발생과 명예회복 방안  
주제 발표 : 김삼웅 (정치평론가, 친일문제연구회 회장)

### • 토 론

- 황인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집위원장)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 정병호 (사월혁명연구소 사회분과 위원장)

- 박래군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사무국장)

- 손석춘 (한겨레 '미디어' 팀장)

- 김지형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위원)

### • 참고자료

97년도를 열사정신계승의 원년으로 정하자!

연대회의 97년 사업계획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단

-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계층별 분석

-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석

- 계층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석

# 역사의 정의와 새희망을 위하여

윤명선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방이후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색다른 그러나 뜻 깊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잊은 기억 상실증 환자에게 희망을 걸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의 근세사는 영광과 축복이기 보다는 부정적 치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봉건주의 신분사회의 말기적 혼란속에 강대국의 식민지 확대정책이 국권과 강토를 유린했고 이념의 산물인 분단으로 말미암은 민족적 비극은 억압과 착취, 갈등과 반목의 역사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갑자기 밀어닥친 산업화 공업화의 물결이 시장자유경제라는 이름으로 계급사회를 구조화 하면서 민중을 억압 받게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러한 이념과 남북분단, 노자간 모순의 역사적 배경속에 식민지 분단, 전쟁을 겪으면서 민중의 인권은 철저히 짓밟혔고 생존권마저 가진자들의 논리위에 농락 당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민중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희생을 강요 했습니다. 민중속에는 정의와 양심 인간의 기본인권과 생존권을 목숨으로 지키면서 민중의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민중의 힘을 올곧게 모다 세우면서 위기를 돌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등한 참민주, 사람사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며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바친 사람들! 우리는 그사람들을 가리켜 열사라고 부릅니다.

금번의 학술세미나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산화해 가셨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괄과 민주화운동(노동, 통일, 빈민, 교육, 사회, 여성, 인권운동 등 진보적 민중운동의 통칭) 과정에서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및 폭압체제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한

분들까지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회적, 역사적, 사상적, 법률적, 법의학적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세밀하게 재조명 하므로써 학술논리적 체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또 국가적으로나 민중사적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분들에 추모 기념사업을 통하여 정신계승과 새로운 사회 발전을 위해 나아갈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바람 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일과적이거나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심도있게 3차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입니다.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한 단체나 개인이 왜 불명예스러운 범법자 범의자가 되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땅의 이만한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열사, 희생자들과 참여하신 분들이 애국지사나 열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이상은 아니더라도 마땅히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분들께 명예와 영광을 드리고 국가적 사회적 예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본 학술세미나의 과제이자 궁극적 목표 입니다.

매회 마다 토론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늘 1차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위한 개괄과 더불어 목적과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내재되어 있는 문제(예:호칭분류등)도 꺼내어 중요한 몇가지 틀거리를 규정(?)하고 2차에서는 1차토론 과제와 기본적인 인권문제 및 사상의자유 이와 관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원칙적 기본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시대가 아직도 열사를 요구(필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차에서는 1,2차 세미나에서 나타난 문제와 성과를 모아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국가로부터 불명예를 안고 있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를 위시한 유가족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주체에 구체적 명예회복 및 예우방안과 행정부, 입법부에 제출할 청원자료 또는 특별법제정의 근거를 확보하고 대중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당당히 선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해방50년이 넘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역사속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고 새희망을 위하여 열사님들의 정신이 참민주 통일과 평등의 세상건설로 부활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연대회의는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 살아있는 자는 왜 과거를 기억해야 하나

임재경(언론인)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한 엄숙한 자리에서 개인적 추체험담(追體驗談)을 화두로 삼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숨쉬고 있는 한국사람들 가운데서 1980년 5월 광주항쟁 직후에 나온 감동적인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르는 이들은 아주 드물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말입니다. 전두환 쿠데타 와중에서 신문사로부터 파면됨과 동시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몇달 지내고 나온 다음, 취업불가 신세가 돼버린 1981년의 초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제적의 광주 출신 불문학도 최권행씨를 나는 우연히 종로에서 마주쳤습니다. 광주항쟁이후 1년이 되도록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내던 터에 그를 만나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종각 뒷골목 어느 생맥주집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근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끝에 거기 젊은이들이 그즈음 많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하더니 이내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아는 대로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한번 더 반복됩니다.

그 순간 나는 어렸을 적에 전기 소켓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처럼 온몸이 흔들려 떨림을 느꼈습니다. 살아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앞서간 사람들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앞서간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서 정말 그렇게 말하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두서 없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간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결연히 버린다는 뜻입니다. 영양섭취가 좋아지고 의술이 발전한 결과 70수, 80수가 보통인 시대에 스물 안팎의 젊은이들이 전 우주를 통해 1회성(Einmaligkeit)에 그치는 생명을 버렸습니다. 고쳐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1회성의 생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분신이거나 투신이거나 그런 결단을 하게되기까지는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다른 길들이 막혔던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학교선생으로부터 혹은 교회의 목사로부터 들고 깨우친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앞서가는 경지는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는 고독한 선택이었던 까닭에 그들은 긴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임들은 착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말 수가 적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뒤에 남은 사람들이 앞서간 임들의 삶과 삶의 박탈을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 실천으로 그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집단적 추체험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살아남은 개개인에게 말을 매개로 하여 앞서간 삶과 삶의 박탈을 개별적으로 추체험하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의롭게 먼저간 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는 우선 그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능력에 사람마다의 차이, 또는 인종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동서양을 아울러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이 있는 것을 보면 기억의 가장 큰 적은 시간임이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퇴색하고 기억이 흐려지면 기억의 대상이 지니는 가치들도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자 하는 과거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는 머나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당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대에 있었던 일을 새삼스럽게 기억하고자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동시대인(同時代人)들의 태만과 야박스런 인정을 반증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동시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만은 지난 10년은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자유언론운동쪽을 말씀드리자면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거의 맨주먹으로 시작하여 백만을 헤아리는 독자를 확보한 대중매체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일은, 거기 매달린 사람들이 한눈을 팔 엄두를 못낼 정도로 소모적 작업이었습니다. 한편 운동에 최전선에 섰던 젊은이들 가운데서 제적학생들이 뒤늦게 학업을 마치고 하나의 생활인으로 자립을 모색하게 된 것은 그 사회적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또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렵사리 복직하여 5년, 10년만에 그나마 직업인으로 안정을 되찾았으

나 일손을 놓은지 하도 오래돼 무디어진 솜씨를 한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헛갈리게 한것은 정작 잘못된 일에서 더 많았습니다. 정치바람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바람은 넓고 좋은 뜻의 정치가 아니라 한 사람은 군부 정당과의 통합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병리적 정치풍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 날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많은 인사들은 -- 그 가운데는 앞서간 또래의 젊은이들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만은 -- 두 사람가운데 자기가 지지하거나 추종하는 어느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열사들이 추구했던 목표들이 자연히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드러났듯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목표들은 특정 정치인의 집권으로 자동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평등이나 정의와 같은 인류 구원의 목표들은 외형상의 민주주의적 치장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민개혁을 내건 김영삼정부가 1996년 12월 26일 날치기로 처리한 노동법-안기부법이 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한보>사건은 무엇입니까. 1-2억원의 뇌물을 떡값이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실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을 너무 몰아세우면 아직 어느 구석엔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는 “씩쓰리 음모꾼”들을 고무할것같아 이만 자제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현실정치에 몰입하는 것 이외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할 일중에서 중요한 일은 민주열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운동기간에 일어난 슬한 의문사-고문 등의 진상을 밝혀 그에 합당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앞서간 이들의 친지, 가족, 그리고 사건관계자의 증언이 있어야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공적인 강제력을 발동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것이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소추를 맡아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열사 추모사업은 최소한 지난날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던 분들이 힘을 합쳐야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범한 양심적 시민층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때 비로서 일의 성사가 순조로우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번 <학술세미나>는 민주열사추모라는 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열사를 추모하는 일은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부에서 이 사업을 곡해하고 싶은 마음을 갖듯이, 또 일부에서는 민주열사추모사업을 아전인수(我田引水)하려는 유혹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민주열사와 민주화운동·희생자들은 구천에서조차 이러한 종류의 불순을 접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술세미나는 민주열사-민주희생자들의 행적과 사상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하여 기술하는 방법부터 착수하여야하며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 민주열사-민주희생자들이 나오기까지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엄정한 분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앞서간 임들의 억울한 넋을 위로한다는 측면에서는 생전에 그들과 가까이 지낸 분들의 정서적 추모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열사-민주희생자의 정신을 이 민족의 공통유산으로 간직하고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는 될 수 있는대로 감정적-감상적 방식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추모사업의 출범에 참여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매우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이 사업이 보복주의의 충동으로 나온 것으로 비쳐져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추모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과거의 망각이나 은폐를 통해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연전까지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리하르트 폰 바이쯔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산자는 과거를 기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이념대립과 민주화 운동

김 봉 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서론

이념이란 인간과 사회를 인식하는 사상체계이다. 인간사회에서 이념갈등은 늘 있어왔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정치투쟁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한국역사에서도 이념대립은 있어왔고 갈등도 빚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이념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념대립과 같은 요소가 등장한 것은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이지만 한국역사는 근대이후 서구제국과는 다른 특수한 역사적 궤적을 그리며 지내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궤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국역사에서의 이념대립이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다.

### 1. 한국 근대 이후 이념대립의 본질

한국에서도 근대이후 많은 이념대립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대립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 한국사회는 근대이후 서구사회와는 달리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가지지 못하고 항시 외세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었거나 심지어는 직접적인 통치아래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그러한 이념대립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념대립이란 외세의 지배를 배척하는 것이거나 한국 사회의 독자적인 발전경로를 만들어 내기위한 것들이었고 그외의 이념대립은 체제측이 만들어 낸 의사 이념대립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대이후 한국사회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담당할 주도세력은 아직 성장해 있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내재적인 모순과 발전경로를 놓고 모대기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을 침략한 제국주의 세력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당시 이미 망해가던 조선왕조 지배층은 결국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어 주권과 민족을 외세에 넘겨주었

고 이후 민족을 말살하는 친일세력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처럼 침략하는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로 전락한 친일파가 국가체계를 장악하고 무한폭력과 민족분열 책동을 통하여 역사를 역진시켜온 것이다. 한국에서의 대결과 갈등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체제측이 강조하는 이념대결은 민족내부를 분열시켜 영구지배를 획책하기 위한 선전 책동에 지나지 않았다.

### 2. 근대 민족국가 수립운동과 이념적 갈등

한국사회에 대한 충격은 서세동점 즉 서구제국주의의 침략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미 해체기에 들어가 있는 조선사회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맞설수 있는 대안이 나올수는 없었다. 결국 조선왕조는 타력에 굴복하여 문을 열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제국주의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회에서 낡은 수구파의 책동에 맞서 사회를 개혁하고 청나라의 지배를 단절하여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고자 했던 첫 정치세력은 개화파였다. 그들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지만 결국은 수구파의 압력에 밀려 몰락할 처지에 있었다. 몰락과 정치적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고자 시도한 갑신정변은 믿었던 일본의 배신과 청나라의 무장 간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갑신정변을 주도한 양반지배층 내부의 소규모 정변으로서는 당시의 조선사회를 제대로 바꾸어 낼수 없었고 또 외세에 의존하여 내부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이후의 역사흐름과 세계사의 교훈이 일러주고 있는 바이다.

갑신정변 실패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세력은 조선사회를 받치고 있던 농민층이었다. 농민들은 동학이라는 종교체를 이용하여 폐정개혁안을 내어놓고 당시 이미 명백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과 서양 침략세력에 대해 척양척왜를 부르짖고 나섰다. 갑오농민전쟁이 조선왕조의 봉건체제 그 자체를 완전히 타도하자고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운동의 속성상 결국은 조선왕조를 타도하는데로 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갑오 농민전쟁은 침략자인 외세를 축출하려는 반외세 국권수호 전쟁이었다. 때문에 양반지배층과 외세가 힘을 합쳐 농민군 정벌에 나선 것이다. 농민전쟁은 주,객관적인 한계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실패로 조선사회는 더 이상 독자적인 국가로서 세계사의 무대에 설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후에도 독립협회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이 나타나서 일정한 정도의 민권의식 신장에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참여주체의 한계와 당시의 정세가 이미 독자적으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는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독립협회 운동이나 애국계몽 운동이 다같이 갑오농민군이나 의병처럼 실제적인 물리력으로 외세의 침략에 저항해 나선 세력을 동비니 토비니 하고 부르는 것은 이 운동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주권을 지키고 사회를 근본적

인 측면에서 개혁할 만한 뜻도 인식능력도 없었음을 반증한다.

### 3. 주권수호운동과 이념갈등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여 민족을 수호하고자 일어난 세력은 갑오농민전쟁이 처음이었다. 농민전쟁 실패후 농민전쟁의 대의인 반외세 주권수호 운동을 이어받은 세력은 의병들이었다. 의병은 일어난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민전쟁이후 나타난 의병은 일본군과 정부군 그리고 지방관서와 지방부호들의 협공을 받으면서 싸우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체계가 이미 완전히 반민중적이고 반민중적인 외세의 압제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병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14만이고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만도 5만의 사상자를 내었으니 그참여의 범위를 짐작할수 있다. 참고로 해산당시 대한제국군대 총수가 8800명이었다. 의병전쟁 역시 여러한계 때문에 침략군을 물리칠수는 없었다. 그러나 의병전쟁은 종결되지 않고 병탄후에는 직접 독립전쟁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갑오농민전쟁이 의병전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독립운동으로 넘어간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맥을 바르게 세워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연속적인 투쟁으로 당시 운동을 지휘하던 중요한 대중적 지도인들이 거의 희생되고 말아 이후 31운동때의 실패를 되풀이한 한 원인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대신 독립협회나 애국계몽운동 계열 인사들은 변질된 채고 거의 살아남아 이후의 어두운 역사에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다.

### 4. 식민지와 민족해방운동

1905년 을사보호조약과 더불어 조선은 주권과 내정권 모두가 실질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손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민지 노예가 된다는 것은 생명과 재산 언어와 문화를 모두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은 병합이후에 철저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독립운동과 별 관계가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모두 해산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를 빼고는 심지어는 교육기관마저 친일적인 것을 빼고는 완전히 해산시켜 버렸다. 조선인은 숨조차 크게 쉴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전민족이 모두 떨쳐 일어나 저항한 것이 31운동이다. 31운동으로 전민족의 항쟁에 부딪친 일본은 본격적인 민족분열책을 구사하게 된다. 31운동 이전시기는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이 민족적인 갈등과 대립을 빚어 왔는데 31운동 이후에는 일제가 민족분열책을 구사하여 민족성원의 일부가 일제통치체제의 부분으로 편입되어 들어 갔다.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활성화 되는 계기로도 작용하

였다. 31운동후 해외에서는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직접 일본군대를 격파하고 그외에도 국내까지 진격하여 일제기관을 격파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의 항일운동의 내용도 다양하여져서 새롭게 진출한 노동자, 농민, 학생, 부인, 문화인등 모든 계층이 단체를 이루어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였다. 31운동 이후로 사회주의 사조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대중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사회주의 사조가 한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족 분열책을 구사하여 약간이라도 재산이 있는 많은 조선인들에게 친일의 대열에 서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우파의 독립운동이나 민족주의 좌파의 민족해방운동이나 모두가 일제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운동 내부간에 갈등이 빚어진 일은 없었다. 오히려 민족해방운동 진영이 과거 몇사람의 독립운동에서 다수의 민족성원이 참여하는 해방운동으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따라서 일제에게도 훨씬 위협적으로 작용하였다. 민족운동의 좌우전선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내외에서 좌우간에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일제타도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섰다. 갈등은 전적으로 일제와 우리민족 사이에 존재하였으며 민족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좌우간의 이념대결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체제에 편입된 친일파와의 갈등이었다, 3대총독 사이또오는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였는데 그것은 완전히 친일파 육성책이었다. 이후의 한국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참고로 소개한다.

1, 일제에 절대 충성을 바치는 자로써 관리를 강화한다. 2, 몸과 마음을 다바칠 친일적 인물을 물색하고 이들을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들에게 침투시켜 친일단체를 만든다. 3, 각종 종교단체에서 친일파가 최고 지도자가 되게하고 일본인을 고문으로 앉혀 어용화 한다. 4, 친일적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명목으로 친일적 지식인을 대량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양성한다. 5, 양반,유생으로 직업이 없는 자에게 생활방도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선전과 민정경찰에 이용한다. 6, 조선인 부호에게는 노동쟁의,소작쟁의를 통해 노동자,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키고 또 일본자본을 도입해 연계를 맺도록 해서 매판화 시켜 일본측에 끌어들인다. 7, 농민을 통제 조종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유지가 이끄는 친일단체인 교풍회, 진흥회를 만들어 국유림의 일부를 불하해 주고 수목채취권도 주어 회유 이용한다.

일제의 앞잡이인 친일파는 식민지배 정책을 집행하고 민족운동 말살에 앞장서는등 일제의 식민지배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었다. 이들은 순수한 독립운동을 극도로 위협시하고 민족운동의 좌우대결 조장에 앞장서 왔다. 이들은 민족해방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 진영으로부터 타도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민중운동 진영으로부터 백안시 되었다. 때문에 이들도 민족해방운동의 좌파전선을 극도로 위협시하고 모략과 탄압을 퍼부어 왔다.



## 5. 분단저지 운동과 이념 갈등

일제시기 우리 민족이 민족해방투쟁을 약하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해방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의 연합군에 대한 항복의 결과로 찾아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비극을 초래했는데 그 첫째가 민족과 국토의 양단이고 그다음 이 외국 군대의 진주와 점령정책에 따른 친일세력의 발호와 그세력의 공고화였다.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해방을 이루었다면 그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앞잡이는 자연히 청산되었을 것이고 식민지 유제도 소멸되었을 것이며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도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 그 어느것 하나 없어지지 않은채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은 새로 진주한 미군의 군정아래서 식민지배 유제 청산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국토의 양단과 함께 찾아왔다. 당시 정세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제 식민지배 유제 청산과 분단된 국토의 통일 그리고 자주적인 정부의 수립이었다. 전 민족은 바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냉전이 시작되었고 특히 냉전의 첨병으로 나서있던 친일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분단구조 실현에 적극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민족의 숙원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 분단구조 실현과 친일파 그리고 예속과 독재를 한편으로 하고 통일구조 실현과 독립운동세력 그리고 자주와 민주주의가 한편으로 되는 전면적인 갈등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전 민족의 반대속에 친일파를 주축으로 추진되는 분단구조는 때문에 미군을 배경으로하여 적극적인 폭력장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폭력장치로 유지되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할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외세를 배경으로 토착적 요소를 폭력으로 짓밟고 지탱되는 정권은 필연적으로 모국의 앞잡이요 예속적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구조의 주도자가 친일파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이 해방이후 일관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구조였다. 즉 식민지배 구조의 냉전적 변형이었다.

## 6.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 그리고 이념 대립

6.25를 겪은 한국사회는 419가 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운동으로서의 통일을 언급할수 없었다. 대신 과거의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이 주된 요인이 되어 서구적 대의제를 정치적인 지표로 하는 한정적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분단과 냉전구조 위에 기생하던 이승만 정권은 영구집권을 획책하게 되고 극도의 부정선거를 치른 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중봉기에 이르게 된다. 419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민주화 세력은 한국사회의 근본문제인 민족통일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장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정세의 변화를 수용할수 없는 미국은 독립운동을 토벌하던 한국인 군대를 앞장세워 민주화의 열기를 말살하고 본격적인

군사 폭력지배 단계로 넘어 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인 것이 과거 1920년대부터 조성된 적색공포였다. 이것은 식민지 시절에도 가장 유효한 협박수단이었고 해방후에도 민족적 통합을 결정적으로 가로 막은 수단이었다. 여기에는 단순한 협박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폭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군사정권은 마음대로 선거를 조작하고 민의를 조작해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도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만들수는 없었다. 선거조작과 영구집권에 항의하는 학생운동과 대중운동에 직면한 박정희정권은 유신이라는 전대미문의 계엄장치를 만들어 내었으나 마침내 붕괴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받은 군사정권도 박정희 군사정권과 같은 방식과 원리를 이용하여 집권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문화운동등 여러 운동이 함께 어우러져 민주화의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냉전의 후퇴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통일운동도 과거와는 비교할수 없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운동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서있는 구조는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우리는 한국의 의사, 열사를 낸 험악한 구조가 마치 이념대립인 듯이 인식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그 많은 희생자와 정치범을 만들어 냈 구조는 내재적인 이념갈등이 아니라 우리민족을 폭력으로 지배하면서 이익을 취해가는 외세 지배구조라는 점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민주화의 목표는 바로 외세의 지배를 끝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앞잡이를 청소해 내는 일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시대적으로는 21세기를 앞두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과거의 식민지배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그 폭력장치와 허위선전의 무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 결 론

앞에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관철해 온 이념갈 등의 양상을 대강이나마 살펴 보았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간의 이념갈등 흐름을 대략 요약하면 개항기에는 내부 혁신과 근대적인 민족국가 수립운동과 외세의존적이고 낡은 봉건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수구세력과 대결이 이념갈 등의 내용이었고 일제의 침략으로 직접식민지화의 위협 앞에 놓였을 때는 주권수호를 위한 전쟁과 일제와의 병합을 추진하는 세력사이의 갈등이 주된 흐름으로 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는 자주독립운동과 식민지배의 영속화를 위한 정책시행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815해방이후에는 분단저지와 식민지 유제 청산문제를 놓고 미군정 및 친일파와 독립운동 세력 및 다수의 한국인 사이에 큰 갈등이 빚어졌다. 625와 419 이후에는 이미 분단된 조국의 재통일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놓고 통일 민주화 세력과 분단 친일파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었다. 군사정권의 파쇼지배기에는 민주화를 두고 군사체제와 국민 대중사이에 심한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족통

일을 두고 분단 흡수통일세력과 수구세력들과의 일전을 치러야 하는 계제에 와있다. 이러한 갈등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그 모양을 달리해 왔지만 언제나 외세와 그 앞잡이를 한편으로 하고 한국의 민중세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갈등구조였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갈 등의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오늘 한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정치범들도 모두 이러한 비 주체적 구조 때문에 생겨 나는 것이다.

## 민주화 운동 과정의 열사·희생자에 대한 의미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열사의 발생과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 방안

김삼웅

(정치평론가·친일문제연구회 회장)

### 역사와 국민의 망각증세

지금 우리 국민과 역사는 엄청난 집단 망각증세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이미 그 명예를 크게 상실하고 말았지만 명색이 문민정부라던 김영삼정권이 지난 4년동안 이른바 개혁과 역사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면서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과제를 외면하였고 국민들도 이를 망각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제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생명을 던진 민주열사와 희생자 그리고 민주화과정에서 의문사 당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예우와 진상규명입니다.

20세기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적인 아이덴티티(정체성)라면 전반 반세기에는 항일 민족해방투쟁이고 후반 반세기에는 통일과 반독재 민주투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반기에 우리 선대들은 피어린 항일투쟁의 결과(비록 외세의 도움을 받았지만) 민족해방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반 반세기 동안(통일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지고 있지만)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간정권을 세우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민간정권이 민주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군사독재를 축출한 것은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전반기 우리 선대들은 민족해방투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의병, 독립군, 지사, 열사, 의사 등의 호칭은 항일전의 과정에서 붙여진 영예로운 이름들입니다. 그밖에도 무명의 애국자들이 해방투쟁에서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후반기의 민주화투쟁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민주열사, 민권투사들이 분신, 투신, 자결, 단식, 고문치사, 옥사, 의문사 등의 이름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바로 며칠전에도 한상근열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조국 해방투쟁에 몸을 바친 애국자들을 외면하였고 오늘 우리는 민족통일과 민주화투쟁에 온몸을 던진 희생자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역사의 집단 망각증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항일투사들이 소외되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왜곡된 역사를 지켜보면서 통분하고 가슴아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민족 민주 희생자들에 대해서 통분마저도 잊은 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가 되풀이 되고 집단망각의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전후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나치를 용납한 독일국민의 4가지 죄를 들어 일대참회운동을 벌이자고 제창한 바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4대 죄에서 형사상의 죄, 정치상의 죄, 도덕상의 죄, 그리고 히틀러 치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형이상학의 죄'로 단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히틀러의 학정과 유대인 학살에 저항하며 죽거나 감옥으로 끌려갈 때 살아남은 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죄'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30년이 넘는 포악한 군사독재와 사이비 문민독재 치하에서 살아남은 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치고 의문사를 당할 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귀한 이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망각해 왔습니다. 한때는 김영삼정권이 빈말로나마 민주희생자들의 덕분으로 문민정부가 수립되었다고 공치사를 하는 듯 하더니 그것도 입치레에 불과하고 아무런 노력이나 정성도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야스퍼스와 같은 철학자가 나와서 사자들의 희생정신과 생자들의 참회운동을 제창한 일도 없습니다. 철저한 외면과 망각만이 흐를 뿐입니다.

정녕 이래도 되는 것인가, 역사와 영령들에게 그리고 유구하게 전개될 자손만대에 웃음을 여미며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와 불의에 대한 투쟁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생명을 던져 싸우는 방법처럼 고귀하고 순결한 희생은 다시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고귀하고 순결한 희생자들을 외면하고 망각해 왔습니다. 정녕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본시 우리 민족처럼 망자에 대해 정성을 다하던 민족도 별로 없습니다. 생자보다도 더 지극정성을 다해 묘소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혼령을 위로해 왔습니다. 특히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셋김굿을 통해 한풀이를 해줌으로써 구천을 헤매이던 중음신(中陰神)이 귀천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 의문사에 국민과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강도를 잡다가 칼에 찔려 죽은 시민에게는 의인 칭호를 주고 국민표창을 추서하면서 건국이념이고 국시(國是)인 자유민주주의와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위해 죽은 열사와 유족

들에게 정부와 사회는 무엇으로 보답했습니까. 또한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끄럽고 죄스런 일입니다.

## 왜정시대 의열사와 독재시대 의열사

20세기의 한국사는 유례드문 민족적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금세기 초에 밀어닥친 망국과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애국자가 생명을 홍모처럼 여기면서 항일민족해방투쟁에 나섰습니다.

왜적의 침략에 의병과 독립군은 총칼을 들고 항전에 나섰고 애국단원과 의열사는 하나뿐인 생명을 내걸고 항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의열사의 전통은 바로 일제침략기에 부활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 표현한 것은 역사적으로 국난기에는 반드시 의열사가 나타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많은 의열사가 장렬하게 구국의 제단에 몸을 바쳤습니다.

근대 일제침략기에 맞서 가장 먼저 생명을 던진 이는 충정공 민영환선생입니다. 공은 1905년 11월30일 새벽 망국에 이른 국가운명을 염려하며 주머니칼로 자결하여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의 자결소식이 전해지자 방방곡곡에서 통곡소리가 지축을 울리고 잇따라 많은 지사들이 순국하여 선생의 뒤를 따랐습니다. 참령 박성환, 원임대신 조병세, 전참판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평양대 병사 김학봉이 순국하고 충정공의 노복까지 목매어 죽였습니다. 이들의 순국정신은 곧바로 8도의 의병정신으로 승화되고 독립군, 광복군, 임시정부로 이어졌습니다. 안중근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국적 이토히로부미를 하얼빈 역두에서 처단하여 항일의거의 횃불을 올렸습니다. 안의사의 거사는 침략원흉과 매국노,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매천 황현선생은 1910년 7월25일(음) 대한제국이 망한 소식을 향리에서 듣고 8월5일(음) 아편을 마시고 절명하면서 "세상여차(世上如此) 사고당사(土固當死)"(세상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선비된 자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순국하였습니다. 매천선생의 순국 소식은 의병이 기병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면암 최익현선생은 대마도에서 식음을 끊고 일제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단식으로 고결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선비 의병대장 면암의 순국 또한 팔도 의병이 꺾기하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의열사는 이와같이 생명을 던져 싸운 희생정신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의열사(義烈士)는 그 정신과 행동이 비슷합니다. 약산 김원봉선생이 1919년 만주길림성에서 비밀항일운동 단체인 의열단을 조직할 때 의사와 열사가 모인 단체라고 하여 의열단의 이름을 지었듯이 의사와 열사의 '정신과 행동'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전적인 해석을 덧붙인다면, 열사란 나라를 위하여 절개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을 말하고, 의사란 뜻이 있는 지사 곧 의와 지조를 굳게 지키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기에 지사라고 불리는 유형이 따로 있는데, 즉 국가 겨레 사회의 앞날을 걱정하여 제 몸을 희생해서 일하려는 크고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해석만으로는 열사와 의사와 지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중근, 전명운, 장인환, 윤봉길, 백정기, 강우규, 박상진, 이재명, 이봉창, 나석주선생 등은 의사의 칭호가 붙고, 이준, 유관순, 박열선생 등에게는 열사의 호칭이 따릅니다. 그리고 최익현, 황현, 손병희, 안창호, 신채호, 양기탁, 김구선생 등에게는 지사의 이름이 제격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해석을 곁들인다면 지사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민족지도자, 의사란 성패에 관계없이 목숨을 내걸고 의로운 행동을 결행한 이를 말하고, 열사란 강력한 항의의 뜻이나 의분을 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으로 내보인 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굳이 어느것이 상위이고 더 장렬하다고 우열을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사란 국가사회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갖춘 지도자급에 해당하며, 의사와 열사란 자신의 몸통이 하나만으로 외적과 폭압구조에 저항하는 민초의 승화된 모습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방후 우리는 지사와 의열사로 상징되는 민족의 소중한 선도자 그룹인 의열사의 호칭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해방된 독립국가에서 더욱이 만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사회에서 지사와 의열사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백색독재, 군사독재, 문민독재의 억압체제에서 민족지사와 의열사의 존재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분신, 투신, 자결, 단식, 옥사, 의문사 등을 통해 몸을 던진 일군의 민주인사들에게 '열사'의 칭호가 붙여진다고 하여 생소하거나 이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역사에 면면하게 이어져야 할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가치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군 출신의 군사독재자를 살해한 중앙정보부장에게 일부에서 붙이고 있는 '의사'의 호칭이 크게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국가유공자로 예우되어야 한다

일제시대의 의열사와 해방후의 의열사가 가치평가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상대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의열의 대상은 왜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의열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은 밀양경찰서 폭파사건, 총독부 폭파사건,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사살미수 황포탄(黃浦灘)사건, 황옥경부(黃錡警部)저격사건, 종로경찰서 폭파사건, 일왕거소 니쥬바시(二重橋)폭탄투척 사건, 동양척식회사 폭파 사건 등 일제 원흉과 일제 기관의 폭파와 악질 관

리의 처단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이 민족해방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방후의 의열투쟁은 대부분이 분신, 투신, 자결, 단식 등 자기희생적인 항쟁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도의 상대가 동족인 관계로 이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보다 시정, 개선토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습격의 대상이 국가 공공기관인 관계로 동포와 국가재산을 보호하려는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동포주의의 발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군사독재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자기희생의 의열투쟁은 대단히 높은 도덕주의와 비폭력성으로 국가사회에 아무런 폐해를 남기지 않으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순국한 의열투쟁이 독재자의 암살이나 집권당사 또는 악명높은 정보기관폭과 등 테러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희생의 비폭력주의를 선택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평화주의와 동포정신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열사들은 이처럼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비폭력정신에 바탕하는 순결한 투쟁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독재세력의 태도는 참으로 몰역사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다 보니 그렇다 치고 명색이 문민정부라는 김영삼정권 역시 민주열사와 민주희생자 그리고 의문사에 대해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해온 것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역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과정에서 순국하거나 희생된 민주열사들도 마땅히 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예우받아야 합니다. 군경이 나라와 치안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희생된 것이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다가 희생된 것은 똑같은 '국가유공자'이며 이미 4.19혁명과 광주항쟁희생자가 이 법률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조사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함께 예우,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1996년 여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0년동안 백인우월주의의 잔학한 인종차별정책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범죄자들의 사죄를 통한 화해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델라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당시 잔혹했던 인종범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범죄자의 사죄와 배상 - 화해로 이어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아공만이 아닙니다. 1983년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1990년에는 칠레에서 탄압정치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범죄자들이 처벌 또는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두환, 노태우씨 등 군사반란과 내란수괴 몇 사람만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과거청산이 끝나고 역사바로세우기가 이루어지는 것인양 서둘러서 봉합되고 있습니다.

내란과 양민학살의 수괴들을 사법처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군사독재치하에서 자행된 인명살상과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민주열사들에 대한 예우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치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비록 사법심판이 내려진다고하여 이것이 과거청산으로 마무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애국단, 의열단과 같은 맥락이다.

반독재 민주열사들은 정부의 냉대와 국민의 망각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열사들의 주검은 마석 모란공원 묘소나 광주 망월동 묘소가 아니면 이곳저곳 공동묘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열사들의 정신은 잊혀지고 시신마저 제대로 건사되지 못한 채 잡초에 묻히거나 한줌 재로 변해 통한의 조국강산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은 결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조 영조는 병자호란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충량과(忠良科)라는 과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충량과를 통해 윤집, 홍익한, 오달제의 삼학사와 김상용, 김상헌 등 충신열사들의 후손이 급제하여 훌륭한 목민관이 되고 청백리로 관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조선왕조가 추진한 충신열사들의 유족과 후손에 대한 보호와 예우 정책은 7, 8대 후손에 까지 이어지고 이에따라 한말의 의병이 일어나는 정신적 도덕적 토양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러 지사와 의열사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가 소홀 해지고 외면되는 풍조를 보이게 됩니다. 정통성이 없는 정권, 부패타락한 권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충신 열사가 소외된 대신에 매국노, 간신들이 우대받고 득세하여 왔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처벌받기는 커녕 복직하여 동학2세 교주 최시형선생에 사형을 선고하는 고등판사가 되고,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일본 헌병, 경찰이 오줌을 저렸다는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선생은 해방조국에서 일제 고등계형사출신의 수사관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북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3.1운동때 유림들의 파리장서(長書)를 들고 중국으로 건너

가 단재선생과 함께 의열투쟁을 벌이다가 제자의 밀고로 체포되어 국내에 압송되어 모진 고문으로 앓은뱅이가 되고만 심산 김창숙선생은 해방후 이승만독재에 항거하다가 친일파 졸개들로부터 한맺힌 꺾박을 받고 집한칸 없이 결국 어느 초라한 여관방에서 운명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열단 선언문을 쓰는 등 항일투쟁과 투철한 민족사학가로서 활동하다가 옥사당한 단재 신채호선생의 며느리와 손자는 지금 화성근교 전세방에서 근근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한 선생은 일제때는 광복군 장교로서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우고 해방후에는 백범의 비서를 지내고 사상계를 발간하여 반독재 민주투쟁에 앞장서다가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암살되고 실족사라는 이름아래 망각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이 의문사를 당하거나 실종, 납치되어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시신조차 건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승만의 백색독재와 군사독재 치하에서 암살되고 '사법살인'당한 애국 인사들의 복권과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범선생을 필두로 진보당 조봉암선생, 민족일보 조용수선생, 인혁당 연루자들이 그렇고 독재자를 암살한 김재규씨와 그의 부하들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독일 베를린의 한 법정에서는 독일의 양심으로 추앙받는 드트리히 본 회퍼 목사를 2차대전 종전 반세기만에 '복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회퍼는 히틀러 암살 미수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어 종전직전인 1945년 4월 8일 나치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장 처형되었습니다.

독일법정이 본 회퍼 목사에게 복권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 회퍼 등 저항 운동가들은 결코 국가를 위태롭게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치의 폐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 회퍼는 크리스트교 목사였습니다. 크리스트교에서 살인은 십계명으로 금지된 계율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독재자의 암살을 모의하다가 체포되어 자신의 생명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본 회퍼는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미친 운전사를 방관하여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고 희생자들의 영결식에나 참석하는 것보다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라는 것이 그의 신앙정신이며 저항권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의열투쟁의 본질은 저항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항권은 천부인권의 하나입니다. 군사독재의 폭압통치 체제에서 인권이 짓밟히고 생존권이 유린당하여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구조가 어려울때 민주열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희생으로 저항권을 발동하였습니다. 정치적인 한계상황에서 국민과 국가재산에 하 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선택한 방법이 바로 자기 희생의 저항권이었습니다.

4.19혁명, 광주민주항쟁이 집단적 시민저항권이었다면 민주열사들의 자기 희생은 개인적

인 저항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국가의 헌법은 저항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전두환, 노태우씨 등 고등법원의 재판에서도 광주민주항쟁을 정당한 저항권의 발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민주열사들의 행위는 당연히 시민저항권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일제시대 의열투쟁을 이은 전통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前文)과 본문(本文)에서 3.1독립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민저항권의 승화된 독립정신과 김구선생의 애국단, 김원봉선생의 의열단 투쟁 등의 항일구국투쟁정신을 승계한다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반독재 의열투쟁과 민주희생자들은 당연히 애국선열의 반열에 모셔져야 할 것이며, 뒤늦게나마 정부와 국회는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위령제 지내고 기념관 건립하자

일제치하의 민족해방 투쟁과 해방후의 민족민주 투쟁은 당시의 극한 상황에서 지선(至善) 지고(至高)의 가치관이고 도덕율이며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목표와 대상에 차이가 있었다면 민족해방과 통일, 민주회복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와 동족독재라는 점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지선 지고의 행동을 택한 선열들에게 칼 야스퍼스의 지적대로 형이상학의 죄 즉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돌보며 미처 이루지 못한 한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도리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하거나 특별법의 제정이 서둘러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청원할 것을 제의합니다.

둘째, 정부나 국회가 주관하여 합동위령제를 지내어 넋을 위로하고 정신을 승계토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가협과 연대회의 주관으로 몇차례 합동추모제를 열었지만 성격상 정부나 국회차원의 위령제를 지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묘소를 모아서 민주열사, 민주희생자 묘역으로 성역화 해야 합니다. 많은 열사가 안치된 마석 모란공원은 지금 도시계획에 따라 터널공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국립묘지나 망월동 묘소 지하에 터널을 뚫었다면 용납될 수 없듯이 모란공원 터널공사는 즉각 취소되고 이곳을 성역화 시켜 열사능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국민운동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교과서에 기재하고 추모

주간을 설정하여 열사들과 관련된 지역에 예컨대 "전태일 거리" "조성만 거리" "박관현 거리" 등으로 지명을 붙여 부르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직도 생사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의문사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섯째,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국민대표로써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한과 가해자의 참회가 한마당에서 융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과거사가 용서되고 새로운 민족사가 화해와 통합의 방향에서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국민과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고 책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의례인 것이며 역사바로세우기의 기초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각종 기념행사의 국민의례순으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애국선열들에 대한 국민된 의무가 짧은 순간의 묵념으로 책임을 다한다면 국가위난시에 어느 누가 다시 몸을 던지겠습니까. 정부와 국민은 집단망각증세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누구의 덕으로 정권을 잡게되었는가를, 국민은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누구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인가를 돌이켜보면서 민족 민주열사와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망자와 유족들이 서럽고 억울한 세월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과거청산 작업의 첫걸음이자 그 열매이다.

## 황 인 성

(전국연합 상집위원장)

1. 발제에서 제기해 주신 바 대로 우리의 굴곡진 현대사속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열사, 희생자들의 의로운 죽음의 의미가 국민들 가운데 폭넓게 알려져 있지 못하고, 국가정책 역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는커녕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범죄자로 기록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열사, 희생자의 정신을 기리며, 그 유족을 보살피고자 하는 민주세력내부의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역시 아직도 국가기구와 사회의 주요기관에 구시대의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고 구시대의 악행을 뒷받침하던 제도와 관행이 청산되고 있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사, 희생자의 명예회복 방안 역시 우리 국민의 철저한 과거청산 노력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 할 것입니다.

2. 늘 새로운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의 보장을 위하여 전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부정부패와 반민주적 악행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고발과 시정, 희생자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정치적 목적의 일시적인 제스취이거나 언술적 수준의 치장이상의 것이 아니어서 실제적인 의미의 청산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항상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 정권에 의해서 과거의 악행이 반복되고 또 다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국민의 노력은 범죄시되고 탄압당해 온 것이 그간의 우리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역사의 청산문제 역시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그리고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사회를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민중의 폭넓은 역사인식 공유와 역량의 결집이 무엇보다 소중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민주적이며 자주적인 정부의 절실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같은 점에서 보면 과거역사청산을 위한 우리 국민의 실천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확인되는 과제를 바로 80년 이후 끈질기게 전개되어 온 5.18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운동의 결과에 비추어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은 국민의 투쟁에 의한 강제로 김영삼 정권은 전두환, 노태우 등을 구속하고 5.18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5.18특별법 제정이 5.18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노태우 구속 이후 일련의 과정들이 5.6공 잔재의 완전청산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기에서 있어 우리는 전체 민주세력의 역량을 결집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모든 기술적 처리와 해결에 앞서 독재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적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제에서 제기하신 것처럼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적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사기관(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 6공 군사독재 수구세력의 인적청산 작업입니다.

각계각층에 잔존하고 있는 군사독재 수구세력의 조사와 자료화, 해명과 반성촉구, 공직 추방, 각종선거에서의 공천배제, 낙선운동 등을 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군사독재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배상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일입니다.

민주화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공안조작사건 재심청구, 해직언론인, 교사, 노동자 등 원상회복, 5.18, 삼청교육대 등 피해자 배상과 명예회복 등입니다.

네 번째로는 군사독재체제를 뒷받침했던 각종 법적, 제도적 청산작업입니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노동악법, 방송법 등의 민주적 개정과 철폐없이 참된 역사청산과 민주, 통일로의 전진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날치기 악법 무효화투쟁, 그리고 한보비리를 밝히고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 역시 청산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갖는 투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수된 많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우리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전 민족적인 투쟁의 최일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역사의 제단에 바친 열사, 희생자들을 국민적 차원에서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각계의 노력이 역사청산의 첫걸음이자 우리 운동의 도덕적 기반과 정신적 자산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1세기로의 전진을 위해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할 것을 제안한다.

장 기 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나라가 어지럽다. 노동법사태와 한보사태로 드러난 기성정치세력의 무능과 부도덕도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지만, 사회 각 부문과 국민 개개인의 관행과 의식도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민주화와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오늘의 사회를 민주사회와 개혁된 사회로 볼 사람은 없다. 선진화와 국민소득 만불을 자랑해왔지만, 오히려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으로 국민경제의 파탄을 걱정하게 되었다.

총체적 위기로 총체적 혼란이다.

이 총체적 위기와 총체적 혼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이 희망과 활력을 얻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원인을 제거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요컨대 정보화사회, 지구촌시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도래로 특징될 21세기를 맞으면서 민족의 통일과 번영,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참된 청산 위에서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고, 민족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민중생존권의 보장, 인간해방의 새사회건설을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다 산화한 민주영령들의 큰 뜻을 기리고 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민주화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민주화의 초석이 된 민주열사들을 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민족통일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한 통일지사들을 수십 년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으니 이 나라가 진정으로 민주화와 통일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가 개최하고 있는 학술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참된 개혁과 21세기의 전진을 위해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학술세미나가 학술적인 행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주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우리사회가 21세기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삼웅선생의 발제문은 대단히 좋은 내용이어서 이 발제문에서 제기한 대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복원함은 물론, 그 유가족들에게 응분의 국민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강조하고 구체화하는 뜻으로 다음 몇가지를 제안한다.

1. 민주화와 민족통일, 민중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분들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로 예우할 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 응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의문사”로 남아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문책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다.

3. 민주희생자를 기릴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의 확립을 위해 “민주희생자묘역”을 조성하고 기념비를 세운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각성과 더불어 국민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민주희생자를 기리고 그 유족을 돌보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장래와 국민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민주희생자가 많은데 이것은 민족의 수치일지언정 자랑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수치스럽고 죄스러운 것은 그 많은 희생을 딛고서도 민주화도 통일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귀한 희생을 제대로 기리지 못한데 대한 응분의 댓가일지 모른다. 고귀한 희생을 민족의 자산으로 세워내야 한다.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군사독재시절의 부정적 유산들에 매달려 민족사 전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함으로써 미래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군사독재기간 탄압한 사람과 탄압당한 사람이 새로운 전진을 위해 화해할 필요가 있겠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두사람을 구속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두사람을 구속하는 일로



군사독재에 영합했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나라 정치와 법률은 난장판이 되어 있다. 군사독재의 원조요 야당 탄압의 장본인이었던 자가 야당총재가 되어 야당탄압을 규탄하고 있고, “5.6공의 황태자”로 공안정국의 장본인이었던 자가 “민주세력”의 “동지”가 되어 “수평적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판국이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에게 유죄판결이 나게했던 검사나 판사는 모두 유신독재와 전두환독재시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재판관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군사독재치하에서는 군사독재에 협조해서 권세를 누리고 정권이 바뀌고서는 군사독재자를 처벌하면서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신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또다시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불의의 극치이다. 여야당의 기성정치인들도 판검사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야당 정치인 대부분이 지난날 군사독재시절 적당히 협조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정치에는 관심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군사독재를 방관한 것이야말로 군사독재의 유지에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을 생각하면 민주화투쟁으로 생명을 바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민모두가 일정정도 군사독재의 유지에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군사독재협력을 은폐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의 역사적 죄악은 이미 세상에 확인되었다. 전두환독재와 노태우독재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판사, 검사와 공안세력,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학자 등의 죄상이 문혀 있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를 처벌하면서도 전두환정권과 노태우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한 것 때문에 아직도 구속되어 있거나 공민권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니 이르고서야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의 의미가 없다. 특히 김영삼정권이 문민독재와 개혁기피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두환·노태우씨를 구속한 측면이 강하다는 데서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은 민주화와 개혁으로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민독재의 강화와 개혁기피의 방편이 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모든 것을 밝혀 옹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시절의 책임을 다 규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밝히고 옹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면 차라리 21세기로의 전진을 다짐하면서 군사독재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정의를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군사독재의 실질적 책임자와 그 부화뇌동자들의 지위를 유지시켜 준채 민주희생자의 명예회복과 구속된 민주인사의 석방은 이루지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세력”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시대적 과제와 정의구현의 차원에서 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서 가해자를 사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을 포괄적으로 청산할 것을 제안한다.

김삼웅선생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제안하셨는데 그 취지가 위와 같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명칭을 ‘과거청산과 미래창조를 위한 국민화합위원회’로 하는 것이 우리의 여건에 부합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과거청산과 미래창조를 위한 국민화합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으면 한다.

1.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처벌받은 모든 사람을 사면, 석방, 복권한다.
2.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유죄선고를 무효화한다. 재심은 필요치 않다.
3. 군사독재 주도자와 군사독재 추종자도 모두 사면, 석방, 복권한다.

이 일이 의미있게 실현되게 하려면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역사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21세기를 맞는다. 진정 새로운 세기가 되게 하려면 새로운 결의와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 민주화 과정에서의 희생자 문제에 대하여

정병호

(4월혁명연구소 사회분과 위원장)

1. 군사정권은 정치체의 두 기둥인 정당성과 체제유지능율중 정당성을 파기하고 능율성만을 선택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인즉

① 후진성 면치못하고 있는 절대 빈곤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산층을 대신하는 “역사적 역할 대행”을 통해 압축적이고 하향적인 사회변동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②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것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군사정권은 “억압적 국가기구”인 안기부, 경찰, 검찰, 군대등을 내세워 군사 파시즘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런 정책은 결국 산,군복합체제로 민중탄압적 모순과 반통일적 냉전구조의 고착화에 기여했다.

2. 그러나 민족 민주주의를 수호코자한 개인 세력들은 이에 정면으로 저항하게 된다.

5.18, 6.10항쟁이 그것인바 이것은 4.19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군사정권으로부터 정상적인 민주화 과정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단계에서 자유화(Liberalization)-군부내의 한계성 노출과정으로 온건화 과정 둘째 단계에서 문민화(Civilianization)-자유화 조치에 따른 민주과도체제과정 셋째 단계에서 민주화(Democratization)-으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 과정은 반드시 민주화추진세력의 투쟁에서 얻어진다는 점이다. 지배권력이 스스로 민주화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화과정의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부연하자면 3공화국 그리고 5공화국으로부터 자유화 문민화 과정으로 이행될 때 많은 민주역사가 희생되었다. 6공화국과 현 문민정부하에서는 “벌거벗은 권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비민주적제도와 비민주적 관행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

민주화가 온전하게 이루어 질때까지는 비민주세력에 대한 “아니요”라고 주장하는

민주화세력이 투쟁하기 마련인데 여기 역사를 바로 잡기위한 희생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울곧게 살다간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후세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남은 문제는 희생자들을 위한 조사사업, 훈포장사업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의 존재형식은 「각시대 및 각 법형식의 특유한 것을 예리하게 파악하기 위한 역사적 감각」이 필요하다. 여기서 특유한 것이란 민중의 수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말은 「법이 민족과 더불어 생성되고 민족과 더불어 발달하고, 민족이 개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사멸한다는 민족 내적 필연성을 강조한 것」인 바 반민주세력을 차단하고 민주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형법일반의 시효와는 무관하게 반민주세력이 차단되고 민주화세력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은 자연적인 산물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투쟁해서 실현된다는 법의 사회적 목적에 있음을 강조해준다.

# 과거청산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sup>1)</sup>

박래균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무국장)

## 1.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의 위치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문제는 과거청산이라는 대범주 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문제도 과거청산 사업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행될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과거청산의 내용은 과거의 악법과 제도, 지배권력의 반인권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역사를 청산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를 정의와 희망이 넘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청산 작업은 따라서 매우 원대한 것이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일부의 주장처럼 과거청산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과거의 역사에 붙들어 놓자는 것이란 주장은 매우 천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과거청산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문제는 과거청산 사업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들의 죽음과 희생은 단지 개인적인 저항권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역사적인 시기시기마다 자주·민주·통일, 더 나아가 노동해방이라는 민족적·국가적인 과제를 주장하다가 산화하였고, 그 죽음은 곧바로 민족민주운동의 활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즉, 자결을 선택한 열사들의 죽음도 이런 구조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그럴 때라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옳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명예회복시키자는 의미는 과거의 폭압과 공포로부터 우리 사회를 해방시킨다는 것이며,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열사와 희생자들을 복권시킨다는 것은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시킨다는 의미이며, 미래의 우리의 지향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곧 이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진전 정도와 직결된다. 권력의 본질적 내용의 민

1) 현대사의 운동을 민중운동,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 등으로 부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민족민주운동으로 부르기로 한다.

주적 변화와 이런 권력에 의한 명예회복만이 의미있는 명예회복이 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전이라도 이들의 명예회복을 강제할 국민적인 힘의 결집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타협에 의한 명예회복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산화한 이들의 명예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정치적인 타협도 국민적인 힘의 결집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을 죽음을 올곧게 해석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치세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과거청산 작업은 분단과 매관, 독재를 정당화하는 지배세력의 역사관에 맞서서 민중사 중심의 역사관으로 새로 역사를 해석하고 쓰겠다는 의미며, 그럴 때 민족민주열사와 희생자들의 죽음은 현대 민중운동의 중요한 정신사를 형성할 것이며 지배세력의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억압을 폭로하는 생생한 증언이 될 것이다.

## 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발생에 대한 한 의견

우리가 부르는 민족민주열사 또는 희생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부정확하다. 보통 유가족들이나 추모사업회에서 대강 분류하여 쓰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류 방식이다.

현재의 민족민주열사의 범주에는 자결하였거나 저항 중에 산화한 이들, 권력과 악법에 의한 희생자(의문사 포함) 중의 일부를 일컫는 말로 들린다. 이의 전제는 민족민주운동에 헌신했는가이다. 그렇지만, 민족민주운동에 헌신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이 없는 경우-가령 엄혹한 시기에는 절친한 친구나 가족마저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 않았는가-는 매우 애매하다. 사실 열사와 의사의 구분은 불필요할 지 모른다. 우리의 경우 열사들의 발생은 다른 나라와 매우 특수하다. 즉, 자결이라는 형태가 의외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의 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결단과 유교문화적인 전통만을 들 수는 없다. 오히려 운동의 미성숙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구는 높으나 그 요구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단을 통해 사회와 운동세력에게 각성을 주려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희생을 강요하는 억압적 권력 구조와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운동 현실은 개인의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초기 개인적인 결단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자결이 이후 운동적, 조직적 요구를 체현하여 대변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드러난다. 어쨌거나 때때로 이들의 자결은 매우 큰 영향력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문사의 경우는 매우 고심해야 할 문제다. 유가협에 모아져 있는 의문사 사례는 매우 제한적<sup>2)</sup>인 것이며, 이들 사례들마저도 민족민주운동과는 무관한 것들도 꽤 있다. 혹자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2) 유가협에 모아진 약 40건의 사례는 매우 빈약한 것이다. 더욱이 사례들이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것만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를 두고서 의문사 전 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많은 의문사의 사례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에는 그간 독재권력의 공포, 문민 정부에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권력의 속성 등이 작용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피해 유족<sup>3)</sup>들의 체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거나 의문사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라는 차원에서 열사들의 문제와는 다른 방향의 해결책을 요구한다.

의문사든 열사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는 1차적인 것이다. 명확한 진상의 규명 이후 가해자의 처벌,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수집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개별 사례에 대한 풍부한 자료는 매우 미흡하다. 또, 어떤 경우는 자료의 유실-경찰 등에서 파기했다거나 분실했거나-로 거의 자료가 없는 경우조차 있다. 이런 경우는 증언자라도 찾아나서야 한다.

### 3. 과거청산의 원칙에 비춰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의 과정

20세기말의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청산(또는 불처벌)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나 군사독재를 경험했던 제3세계의 경우는 거의 모든 나라가 올바른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관계로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과거의 올바른 청산없이는 미래로의 전진이 늘 위태롭다는 것이다.

과거청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의 대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데서 찾아진다. 과거에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온갖 인권유린과 악행을 서슴치 않았던 이들이 소위 민간정부라고 하는 테에서조차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악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새 정부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새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브라질 등의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많은 인권단체들과 피해자들이 과거청산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다.

우리의 경우 김영삼정권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으로 과거청산 작업의 일부를 진행했다. 이른바 김정권이 자찬하는 개혁의 성과인 '역사 바로세우기'가 바로 이것인데, 이 자체로만도 의미는 있지만, 과거청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결여로 인해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것은 그간 민족민주운동이 주장해온 5.18문제의 해결 5대 원칙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광주의 5월단체들과 민족민주운동은 진상규명, 사법처리,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이라는 5대 원칙을 제시하여 왔다. 이는 과거청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루이 주아네의 최종보고서 초안은

3) 언론에서도 흔히 혼동해서 쓰는 말이 유가족과 유족이다. 유가족은 투사·전사의 남겨진 가족을 말하며, 유족은 보통의 유족을 말한다. 따라서, 삼풍 유가족은 틀린 말이며, 삼풍 유족이라고 해야 맞는다.

“사회 전체의 진실을 알 권리와 국가의 기억할 의무라는 기본 바탕 위에서 인권유린의 사실, 이유, 구조에 대한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관련 공문서를 보존,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인권침해범의 실효적 사법처리를 위해 공소시효, 사면제도, 망명제도, 범죄인 인도제도, 필석재판금지, 군사법원의 관할 등에 관한 각종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sup>4)</sup>

이런 원칙은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 과정 또는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의 방향에도 원칙적으로 원용될 수 있다. 열사들은 왜 분신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인지가 공개되어야 하며, 그런 열사들의 주장과 투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광범하게 밝혀야 한다. ‘집단망각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진실의 공유를 차단하는 언론과 사회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또, 희생자들의 경우 고문을 했다거나 했으면 그 가해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 가해를 한 이유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 가해자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 가해자만이 아니라 가해를 지시한 자와 은폐를 지시하거나 행한 자 등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는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기초 위에서 엄정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정신계승이 이뤄져야 한다. 또, 나아가 열사와 희생자들을 낳았던 구조적,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과거 정권의 기득권 세력의 역사적 반동 기도를 누르고 국민적인 지지 위에서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사업이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는 이런 과정을 밟은 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면적인 사면을 통한 화해는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은 결코 개인적인 한풀이 차원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미래사회를 건강하게 건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처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 사업은 과거청산 사업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이 사업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더 기다려 보라고 강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잘못 단추를 꿰었을 때 발생할 일보다는 조금은 늦더라도 천천히 원칙에 맞게 진행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 4. 결 어

과거 청산은 결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며,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다. 과거를 잊는 사

4) 광노현, 「전·노재판 이후의 과거청산: 과제, 원칙, 전략」, 『민주법학 제1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56쪽.

회는 결코 미래를 올바르게 건설할 수 없다. 또한, 과거의 열사와 희생자들을 외면하고서는 진보를 위한 열정을 얻을 수 없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민간운동이 먼저 민족민주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가, 인권활동가,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과거청산국민위원회를 강화하여 그 작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추모사업연대회의가 추진하는 범국민 추모사업회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청산국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업도 뜻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다. 기초적인 작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는 선에서 이 사업은 출발해야 한다. 진실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민족민주열사와 언론의 책임

손석준

(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 기자)

저는 사실 오늘 이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해 있지만 떳떳하지 못합니다. 아니 단지 떳떳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큰 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단지 '살아남은 자의 슬픔'때문만은 아닙니다. 민족민주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그 분들 스스로가 지녔던 불굴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못지않게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삶을 던지기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사전달방법입니다. 저 엄혹한 시절 만일 언론이 제 구실을 했다면, 언론이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단 한 줄이라도 한 장면이라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했다면, 과연 그런 극단적인 길을 택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때면 뺏속까지 깊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왜 열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는가는 자명합니다. 바로 언론이 언론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단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는 민중시인으로 불린 사람의 말을 빌려 "죽음의 고향을 당장 집어치우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습니 다. 언론은 "왜 생명을 경시하는가"라며 되레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생각입니다. 바로 언론의 침묵과 외면 때문에 그분들이 삶을 던졌음에도 언론은 그 분들에게 참으로 가증스럽게도 '훈계'를 하고 나섰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갇힌 이 순간에도 언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족민주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분들의 불꽃 정신을 조명하는 것은 외면한채 오히려 '이승만살리기'나 '박정희 복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도 저는 이 땅의 대부분 언론이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민주운동에 삶을 아낌없이 바친 그분들의 삶을 올바르게 조명하자는 오늘 이 모임도 언론에 의해 묵살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 여론화에 실패한다면, 이는 단지 분노만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학교안에서 통일집회를 갖자 학생들을 일러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쇠파이프특공대"나 "조선노동당의 재남 행동대원"으로 몰아세우며 공권력의 투입을 앞장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우리 언론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아니다”는 섬뜩한 주장을 사실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정당방위적인 행동은 폭력으로 몰아세운 채 경찰의 성추행은 아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전달을 여전히 우리 언론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들의 아들 딸 우리들의 아우와 누이가 자신들의 뜻을 여론화하기 위해 언제 또 다시 민주제단에 삶을 던질 지 모릅니다.

저는 민족민주운동의 올바른 자기매김은 우리 겨레가 하나로 거듭나고 그 통일된 우리 조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처럼 뿌리깊고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민족민주운동에 삶을 던진 그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되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의 길을 왜곡하고 있는 언론을 개혁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개혁운동은 감히 말하지만 결코 언론인들만의 몫일 수 없습니다. 언론수용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아직도 참회하지 않는 언론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여전히 냉전이데올로기에 젖어 ‘기득권 세력’만을 대변하는 오늘의 우리 언론을 이대로 두고는 민족민주운동의 명예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민주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토론 요지

김지형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위원)

### 1. 현대사속에서 열사의 발생 이유

- 우리 현대사는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 그 과정에서 민중이 중심이 된 변혁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치루었다.
- 이렇듯 희생 열사의 문제는 70, 80년대에만 있지 않았다.
- 일제시기부터 분단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 우리 현대사의 사회변혁운동사가 외면적 혹은 지배층의 의도적인 분식(粉飾)으로 인해 좌·우이념대결의 과정으로 왜곡되면서 희생열사들도 다분히 이념적이 재단에 의해 판단되었다.
- 임시정부계열이나 민족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들만 정부차원의 포상이 이루어졌을뿐 사회주의계열이나 무정부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활동가들에게는 포상은 커녕 역사기술에서도 제외되었다. 즉, 누가 더 치열하고 조직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했는가하는 문제는 도외시되었다.
- 이러한 역대 권력층의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해방이후 현대사속에서 발생한 희생열사문제의 올바른 관점과 명예회복은 불가능하다.
- 분명히 할 점은, 우리 희생열사들이 사상·이념적 분쟁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민주화·노동해방·민중의 생존권 등을 위해 싸우다가 산화해 나갔다는 점이다.

### 2. 열사의 호칭문제와 우리 역사속에서 검토

- 현재 통칭 ‘열사’라고 불리워지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성 문제
- 의사·열사·희생자 등 여러 의미가 있지만,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열사’호칭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대사회운동과정에서 테러나 암살 등의 근대적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사 호칭을 받을 대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희생자라는 의미는 몰추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결단에 기초해 산화한 열사라든지, 권력층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경우라든지 혹은 민중과 권력층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 등도 모두 크게 보면, 사회변혁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또한 지배권력층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는 면에서 '열사'호칭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 3. 열사의 유형화 의미

#### \* 희생원인에 따른 분류

- 집단적으로 희생된 경우와 개인적으로 희생된 경우
- 개인의 결단에 기초해 산화한 경우와 지배권력의 폭력에 의해 당한 경우
- 불법적인 폭력에 당한 경우와 합법이라는 틀속에서 법살(法殺)당한 경우
- 희생원인과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와 의문사로 남아 있는 경우 등

#### \* 신분·소속에 따른 분류

- 계급·계층별 분류
- 노동·학생·농민·지식인·여성·종교인 등

- 열사들의 유형화 과정은 우리 현대사에서 변혁운동의 수행을 어느 계급·계층이 가장 치열하게 받아들였는가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 해방 이후 60년대까지는 지식인·학생들이 많았으나, 7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점이 시사적이다.

- 또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 열사들이 희생된 직접적 배경이나 원인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지배권력의 불법적인 폭력에 희생된 사례는 국민적 저항과 거센 항쟁을 야기하였으며, 의문의 희생으로 남아있는 통분의 사례들은 아직도 우리의 과거사가 진정으로 청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개인적 결의·결단에 기초한 산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의지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넓고 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4. 역사 속의 민중항쟁과 열사

- 우리 현대사 속의 민중항쟁은 대개 열사들의 죽음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 1946년 대구 10월항쟁, 4·19항쟁, 5·18항쟁, 6·10항쟁 등
- 역사적 항쟁을 상기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열사들이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 이러한 사실은 열사들의 희생이 항쟁의 계기인 동시에 완강하게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의 명분이자 항쟁의 상징이요 정신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 97년도를 열사정신 실천의 원년으로 정하자!

### 1. 투쟁의 정점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있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신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분신, 투신, 할복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치신 분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되신 분들, 그리고 오랜 운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 후유증, 옥중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310분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산화하셨다. 그중 노동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희생자가 85분, 학생운동을 하다 산화하신 열사·희생자로는 81분, 재야 활동을 하다 산화하신 분과 빈민, 농민, 일반 시민으로는 41분, 그리고 사형 당하시거나 옥중에서 운명하신 분, 출옥하여 운명하신 장기수 선생님이 83분에 이른다. 이러한 집계는 『전국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아 이중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거나 행방불명된 296분의 열사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분들을 포함하면 606분에 이른다. 또한 전태일 열사 이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산화하신 분들은 더욱 많다. 이 모두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몇 만을 헤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젊음을 다 꽃피우지도 못하고 산화하신 절박함은 무엇일까. 그리고 열사와 희생자들이 하나뿐인 고귀한 목숨을 바쳐 가며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노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를 억압하는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 자본에 항거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것이다.

### 2. 추모(기념)사업의 지위와 역할

추모(기념)사업은 항일 독립운동과 자주·민주·통일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가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성취해 온 역사의 발전을 위해, 투쟁의 최 정점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며 의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모(기념)사업을 통해 민족과 민중을 위한 정부

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들을 통해 역사 속에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는 인간의 위대성을 전파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시기의 반민족, 만민주, 반민중, 반통일 세력을 척결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선봉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다.

### 1) 정부 차원의 추모(기념)사업

최근 들어 국가 보훈처에서는 이 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홍보를 하고 간략한 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사회주의 계열에 속해 있었다 하여 선정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미 복권된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친일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미 군정 시기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기간동안 산화하신 열사·희생자의 명예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친일파의 잔재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이후 이승만 극우 반공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득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수 많은 열사·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자칭 문민 정부라 일컫는 김영삼 정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서 역대 정권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노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선정한 국가 보훈의 대상은 ① 애국지사 ② 전몰,전상 군경 ③ 순직,공상 군경 ④ 4·19의거 사망자,상이자 ⑤ 재일 학도의용군 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상이자,순직자 ⑦ 기타 제대군인,반공포로상이자,월남귀순용사,상이자 등이다.

### 2) 국민적 추모(기념)사업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시한 추모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역대 정권은 그 사업을 시행할 의지나 노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반하여 국민적 노력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좌절되거나 단절되기도 하였지만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

① 해방 직후인 1945년 조직된 '반일투사 원호위원회'는 항일 투사 발굴 사업과 국가 원호 사업을 연구하였으나 미군정청의 극심한 탄압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사업 내용이 소실되었다.

②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5월 31일 경북지역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피학살자 유족회'는 10월 20일에는 서울에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유족회에서는 학살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애국자들의 명예회복을 역사적

으로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 등 2개 특별입법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다 5·16 군사쿠데타로 좌절되면서 유족회 성원이 사형과 징역 15년, 10년 등을 선고 받았다.

- ③ '갑오동학농민전쟁 기념 사업'
- ④ 4·3 제주민중항쟁 기념사업과 여순 민중항쟁 추모 사업
- ⑤ 산청, 함양, 거창, 문경, 금정굴 양민 학살 사건 유족회와 대구피학살자 유족회 명예회복 사업
- ⑥ 4·19 혁명 기념 사업
- ⑦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 사업
- ⑧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사업

### 3. 추모(기념)사업회의 현황과 과제

#### 1) 현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추모 사업은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정통성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추모(기념)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면 적어도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만이라도 뭉쳐서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 사업을 하고, 정부 당국이 받아들이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이것은 역사의 요구이며 민중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옳지 않은 기풍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자주·민주·통일을 진전시켜 온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열사·희생자들이 산화하셨기 때문에, 더욱 자책감을 갖고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타성에 젖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추모 사업은 추모사업회 일꾼들만이 담당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할 일도 많은데 되지도 않을 추모 사업 같은 일에 매달려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열사들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며 추모 사업에 관련된 일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풍토이다. 물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그것은 바로 열사들을 기리는 사업이다.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치열한 전투의 최선봉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열사·희생자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운동의 도리가 아니며 동지에 대한 의리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섯 번째로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 추모사업회와 학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열사와 함께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졸업하면 추모(기념)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대폭 축소 되거나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추모사업회 일꾼들도 졸업과 동시에 추모사업회를 후배에게 떠 넘기고 추모사업회도 함께 졸업해 버린다. 심지어



어는 추모사업회를 맡을 일꾼조차 없어 명맥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최근 몇 년들  
어 학생 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 추모사업회보다 노동 운동 과정에서 산화하신 열사  
추모사업회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열사·희생자들을 제한된  
틀에 가두려는 현상이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산화하신 배경과 요구는 전 민족적이며  
전 국가적 차원으로 제기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이후에는 열사 출신 학교  
나 추모사업회의 협소한 울타리에 가두어놓고 있다. 열사·희생자들을 우리 열사니, 남의 열  
사니 하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추모사업을 하고 있는 일꾼들  
은 모두가 떠난 빈 자리에서 비애감마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 2) 과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추모 사업회는 없는 것이 낫다. 이것은 추모 사업을  
하고 있는 일꾼들이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  
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함에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난관을 헤쳐 가며 고  
군분투하고 있다. 열사가 산화하시고 나서 체면치레용으로 추모사업회를 만들고 뒤도 돌아  
보지 않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추모(기념)사업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 째, **각급 단위가 추모(기념)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받아 안아 최우선의 사업으로  
자리 매김 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에서는 '우리 학교에 추모사업회가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라거나 '우리 학교에는  
열사가 없으니 할 일이 없다.'라는 자세를 탈피하고 추모사업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 적  
극적인 자세로 추모(기념)사업에 학생 대중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운동 단체에 공히 해당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추모(기념)사업을 담당할 간부가 정  
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각급 단위에 '열사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총학생회나 각급 단체  
의 조직에 연사, 총무, 조직, 기획, 정책, 홍보 등의 부서는 있되 '열사국'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며 추모(기념)사업의 수준이다.

둘 째,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반드시 해 내는 기풍을 세우자.**

연대회의에서는 97년도 '열사력'을 발행한바 있다. 거기에는 주 단위로 산화하신 기일에  
맞춰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사진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활용하면 총학생회에서  
는 매 주마다 '열사 대자보'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방송국에서는 하루 세 번 정도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점심 때, 오후에 그날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알리고 추  
모곡을 튼다던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보사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발행 시차 기간에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소개할 수 있다.

셋 째, **전국적인 추모(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추모(기념)사업의 성격은 범 국민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다. 따라서 전국적인 추모(기념)사업에 동참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연대회의에  
서는 96년도 9월부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을 전국적으로 선포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일회성으로 치러 온 것에서 탈피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기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범 국민적인 차원  
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연대회의에서는 이 기간 동안 '전태일 거  
리'를 청계천 2가부터 4가까지로 선포한 것을 비롯하여 명동 성당 앞거리를 '조성만 거리'  
로 선포하였고, 구로 공단의 가리봉 5거리를 '박영진·김종수 거리'로 선포하였다. 이 추모  
및 기념 주간은 올해에도 9월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열사의 거리'도 전국  
에서 동시에 선포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단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지구  
체계에서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열사·희생자가 있는  
학교와 지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열사의 거리' 선포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는 몇 곳에 집  
중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 째, **추모(기념)사업을 항구적으로 하기 위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  
사업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연석회의는 범국민추모사업회를 건설하는 골간이다. 범국민추모사업회는 국민 대중이  
주체가 되어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을 위시한 민주화 운동의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 규명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조직이다. 범국민추모사업회는 기념관 건립이나 묘역  
성역화 사업, 사적지 지정 사업, 국정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 국가 기념일 제정 사업 등  
도 해 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무심했다.**

**이제부터라도 목적의식을 갖고**

**열사에 대한 빛을 갠아 나가자.**

# 97년도 추모(기념) 사업 추진 계획

##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1. 학술세미나

#### 1) 내용

- ▶ 학술세미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과 그 과정에서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의미를 조명한다. 이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산화하시거나 사형 당하신 열사·희생자들과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 사회적, 역사적, 사상적, 법률적, 법외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정리한다.
- ▶ 1차 학술세미나는 전체 학술세미나의 흐름을 규정한다. 따라서 전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괄과 더불어 목적의식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통칭하여 '열사'라 호칭되어 오던 것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분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6·10 항쟁 10주년 기념 주간에 개최할 2차 학술세미나는 본질적으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다. 열사들의 문제도 그러하거나 옥중에서 전향 과정의 모진 고문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사상적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사형 당하신 분들,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된 후 보안사의 프락치 강요를 거부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수많은 군 의문사, 안기부의 공작 과정에서 사상적 절개를 지키며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 이 모두가 목숨과 맞바꾼 결정체는 무엇이었나를 확인하고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 9월 추모 및 기념 주간에 개최할 3차 학술세미나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을 위시한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총괄이며 민주화운동의 향후 방향 제시이다.
- ▶ 2차 학술세미나부터는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에서 주최하기로 하였다.

#### 2) 참여 방안

- ▶ 열사·희생자 소속 총학생회에서는 열사·희생자에 대한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정리하고 명예회복 방안을 연구한다. 특히 의문사에 관련하여서는 더욱 상세한 자료를 발굴하여야 한다.
- ▶ 관련 내용을 대자보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
- ▶ 추모·기념사업을 담당하는 일꾼들은 전원 참가하고 참여자를 조직한다.
- ▶ 각 대학 학보사에서는 금년도 기획 특집으로 열사·희생자들을 위시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취재와 관련 기사를 게재한다.
- ▶ 각 대학 방송국에서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한다.
- ▶ 각 대학 학술, 정치 연구 동아리는 학술분과 특위에 결합하여 내용을 풍부히 만들어 나간다. 특히 의문의 죽음을 당한 열사·희생자 유관 학교, 단체, 노조는 의문사 특위를 구성하여 학술세미나에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공연 '1997년 봄 그리고 부활'

#### 1) 내용과 형식

- ▶ 이번 공연은 6·10 항쟁 범국민기념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하기로 한다.
- ▶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취지이므로 이에 맞는 내용과 형식을 갖되 너무 무겁지 않도록 한다.
- ▶ 면면히 흘러온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각 투쟁의 정점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서 있음을 부각시키고 그 정신을 계승 하여야 함을 주지시킨다.
- ▶ 집체극 형식과 연주회 형식을 배합하고 문학, 영상, 춤 등이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이 되도록 한다.
- ▶ 각 대학 문화 일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2) 참여 방안

- ▶ 각 위원회에 참여한다. (6·10 항쟁 범국민기념사업단 문화위원회와 결합하여 기획, 문화회의 참여)
- ▶ 공연 진행 요원으로 참여한다.
- ▶ 공연 내용을 알린다.
- ▶ 티켓 판매 및 조직 사업을 한다.

### 3. 6·10 항쟁 10주년 기념 주간 행사에서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관련 사업

## 1) 내용

- ▶ 행사 일정과 기본 기획은 6·10 항쟁 범국민기념사업단 기획안을 존중한다.
- ▶ 열사의 광장 조성은 다른 여타의 광장이 축제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기획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으로 산만하지 않고 엄숙하고 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합동 추모제는 지내지 않되, 대규모 추모곡을 하도록 한다.
- ▶ 열사의 광장에서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위' 주관으로 '범국민추모사업회 발기인 대회'를 거행한다.
- ▶ 제 2차 학술세미나를 배치한다.

## 2) 참여 방안

- ▶ 각 위원회에 참여하여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
- ▶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위와 발기인에 참여하고 조직한다.
- ▶ 연석회의의 결의에 따라 역할을 담당한다.

## 4.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 1) 내용

- ▶ 추모 및 기념 주간은 9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일요일)까지로 한다.
- ▶ 첫 날에 '범국민추모사업회 발족식'을 갖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을 선포한다. 지역에서는 '범국민추모사업회 ○○지부 발족식'을 갖도록 한다.
- ▶ 각 지역에서 동시에 '열사의 거리' 선포식을 거행한다.
- ▶ 제 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 미술제, 사진전, 비디오 상영, 열사의 거리에서 상황극 공연, 추모곡 공연, 기념 조형물 설치 등의 부대 행사도 갖도록 한다.
- ▶ 9월 6일 (토요일)에 '제 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를 갖는다. 지역에서는 9월 7일 (일요일)에 지역의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 문화 공연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범국민 추모제에 결합하는 방안이 있다.
- ▶ 전국 각지의 학교, 단체, 노동조합에서는 추모 및 기념 주간 현수막을 부착한다.
- ▶ 소형 조형물, 추모 기념 주간 버튼 등을 제작하여 재정 사업을 한다.

### 2) 참여 방안

- ▶ 각 위원회에 참여하여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
- ▶ 각 지구 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지구와 지역 차원에서 추모 및 기념 주간에 열사의 거리

조성과 부대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해 들어간다.

- ▶ 현수막 부착과 기념 버튼 부착을 조직한다.
- ▶ 열사·희생자들을 알리는 작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한다.
  - ① 총학생회와 노동조합 등의 조직에서는 매 주간 '금주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라는 제목으로 열사를 알리는 대자보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열사력을 활용하거나 연대회의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 ② 학교 신문, 노보, 단체 기관지에 발행 시차 기간에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를 소개하는 고정란을 만들 수 있다.
  - ③ 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일 방송을 시작 할 때나 점심 방송을 할 때 그날 산화하신 민족민주열사·희생자와 추모제를 알리고 추모곡을 틀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 5. 범국민추모사업회 발족

### 1) 내용

- ▶ 범국민추모사업회에서 추모 및 기념사업을 해야 할 범위는 유가협에서 집계한 310위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과 광주민중항쟁에서 산화하신 296위의 열사, 그리고 갑오농민전쟁 희생자, 제주 4·3 민중항쟁 희생자, 여순 민중항쟁 희생자, 산청·함양·거창·문경·대구 등지의 피학살자, 4·19 혁명 과정에서 산화하신 분들을 망라하는 방식과 범국민추모사업회의 목적과 추모 대상 범위를 명확히하여 구성하는 방식 등을 놓고 토론하여 결정한다.
- ▶ 늦어도 3월경부터는 열사·희생자 관련 제 단체와 유족회에 제안서를 보내어 참여를 독려한다.
- ▶ 4월경에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위를 구성한다. 준비위는 열사·희생자 관련 제 단체와 유족회, 그리고 연석회의의 참여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 ▶ 6·10 항쟁 기념 주간에 발기인 대회를 한다. 발기인은 개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1,997명 이상 되도록 조직한다. 발기인은 이후에 범국민 추모 위원으로 전환한다.
- ▶ 이후 9월까지 범국민 추모위원을 조직한다.
- ▶ 추모 및 기념 주간에 범국민추모사업회 발족식을 갖도록 한다.
- ▶ 범추사 결성 이후 연석회의 소속 제 단체는 범추사에서 일익을 담당한다.

### 2) 참여 방안

- ▶ 각 위원회에 참여하여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
- ▶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위와 발기인에 참여하고 조직한다.
- ▶ 연석회의의 결의에 따라 역할을 담당한다.
- ▶ 각 지역에서도 지구 연대회의가 주축이 되어 연석회의를 조직하고 범추사 지부 결성을 준비한다.

#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단 ●

## 노동자

- 70년 전태일
- 71년 김진수
- 79년 김경숙
- 80년 김종태
- 84년 박종만
- 85년 홍기일
- 86년 박영진 변형진 강상철
- 87년 황보영국 이석규 이석구 박응수 이대용  
유인식 이순덕 김현욱 박용선 표정두
- 88년 이대건 김장수 최은범 장용훈 성완희  
이문철 송철순 문송면
- 89년 김윤기 김종수 이상남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종하 조정식  
최완용
- 90년 최태욱 이영일 최 동 박성호 원태조  
강민호 김병구 김상원 오원석 신용길
- 91년 석광수 권미경 김처칠 윤용하 정상순  
이진희 유재관 이정순 김봉환 신용길  
금진현 배주영 이광웅
- 92년 금진현 박복실 강희수 오원석 임희진
- 93년 서영호 김주리 고정자 박미경 조경천  
임혜란 채희돈 최완용 정영상 정영부  
길옥화 박순덕 최 응
- 94년 김상욱 최성묵 김낙성 엄익돈 윤양덕
- 95년 양봉수 박삼훈 조수원 서전근
- 96년 김시자 유구영 김왕찬 박문근 오용철

## 농민

- 85년 엄동익
- 86년 오한섭
- 88년 김길호
- 89년 이찬우 박경희
- 93년 김영자
- 94년 김순복 손구용

## 학생

- 75년 김상진
- 80년 김의기
- 81년 김태훈 최종철
- 82년 박관현
- 83년 황정하
- 85년 송광영
- 86년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이경환  
진성일
- 87년 박종철 박선영 장재완 이한열 박태영  
이재용
- 88년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양영진 유병진
- 89년 남태현
- 90년 정성묵 김수경 심광보 최응현 신장호  
김기훈
- 91년 강경대 김영균 천세웅 박승희 김귀정  
김철수 손석용 고재욱 류정하
- 92년 박현민 이상렬 윤재영
- 93년 이경동 한상용
- 94년 이창환 신건수
- 95년 장현구
- 96년 진철원 노수석 권희정 황혜인 오영권  
박동학
- 97년 한상근

## 도시빈민

- 89년 이재식 정상률
- 90년 이원기
- 92년 김선호
- 95년 최정환
- 96년 신연숙
- 97년 민병일

## 재야

- 82년 기종도
- 87년 채광석
- 88년 신영일 정성규
- 90년 김병근 조영래
- 91년 김기설 양용찬
- 92년 오원진
- 93년 성순희 김영자 황인철
- 94년 이범영 문익환 이오순 김남주
- 95년 박현재

## 시민

- 91년 이정순 정상순
- 95년 이형기

## 장기수 선생

- 년도미상 권창수 권홍직 변치수 전순직 김도한
- 61년 조봉암 최백근 조용수 최근우 정순종
- 65년 박재복
- 69년 권재혁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정태묵  
손순남 윤성만 이양섭 최종천 최한무  
하상혁 황대연
- 70년 권오금
- 71년 김대석
- 72년 고훈을 이연송 한태갑 한현수
- 73년 김영환 김태선 김영호 조인국
- 74년 김태원 박운업 배학수 윤종하 이동근  
현명원
- 75년 서도원 도예종 우홍선 송상진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여정남 장석구 기세일  
신춘복
- 76년 공재용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 77년 김경익 김홍직 백갑기 안준호
- 78년 박정래 이훈동 탁해섭
- 79년 손순영 송순희 임창규
- 80년 김규창 김승운 김용선 변형만 노천도
- 81년 이재문 최점수

- 82년 신항식
- 83년 신창길
- 85년 이용운 황필구
- 86년 전재권 강동창
- 87년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 88년 유진곤 공인두 박창술 윤기남
- 89년 이상을 조용순
- 90년 정대철 김병인
- 91년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 92년 박관수 김대봉 이태영
- 93년 이래선 현승중 권두영
- 94년 김광삼
- 95년 정종서 강철순
- 96년 김도한 문한영

## 의문사

- 73년 최종길(재야)
- 75년 장준하(재야)
- 78년 정범영(학생)
- 80년 임기운(재야)
- 82년 정성희(군경) 문영수(노동자)
- 83년 이운성(군경) 김두황(군경) 한영현(군경)  
최은순(군경) 한희철(군경) 허원근(군경)
- 85년 우종원(학생) 장이기(시민) 기 혁(학생)
- 86년 신호수(노동자) 김성수(학생)
- 87년 김용권(군경) 노철승(군경) 이승삼(군경)  
박필호(군경) 박상구(군경) 이이동(군경)  
이태춘(시민) 최우혁(군경) 정연관(군경)  
정경식(노동자)
- 88년 오범근(노동자) 고정희(재야) 우인수(군경)  
박종근(군경) 배중손(노동자)  
문용섭(노동자)
- 89년 이철규(학생) 이내창(학생) 이재호(노동자)
- 90년 김용갑(학생) 박성은(군경)
- 91년 남현진(군경) 송종호(군경) 김영환(재야)  
박창수(노동자) 길왕식(군경)
- 92년 문승필(학생) 안기남(군경)
- 95년 이덕인(빈민)

◆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계층별 분석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	시민	재야	장기수	군경	합계
1960년대									18
1970	1								1
1971	1						1		2
1972							4		4
1973						1	4		5
1974							6		6
1975		1				1	12		14
1976							4		4
1977							4		4
1978							3		4
1979	1						3		4
1980	1	1				1	5		8
1981		2					2		4
1982	1	1				1	1	1	5
1983		1					1	6	8
1984	1								1
1985	1	2			1		2		6
1986	3	8	1			1	2		15
1987	12	6				1	4	9	32
1988	10	4	1			3	4	3	25
1989	10	3		2			2		17
1990	8	6		1		2	1	2	20
1991	11	8			2	3	3	4	31
1992	6	3		1		1	3		14
1993	10	2	1			2	3		18
1994	3	2	2			4	1		12
1995	4	1		2		1	2		10
1996	5	6		1			2		14
1997		1		1					2
년도미상							4		4
합계	88	59	5	8	3	22	101	25	312

◆ 년도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석

	분신	활복	투신	타살	음독	목매	옥사	의문사	병사	사고사
1960년대							18			
1970	1									
1971				1			1			
1972							4			
1973							4	1		
1974							6			
1975		1					12	1		
1976							4			
1977							4			
1978							3	1		
1979			1				3			
1980	1		1				4	1	1	
1981			1				2		1	
1982							3	2		
1983			1				1	6		
1984	1									
1985	2			1			2	1		
1986	8		1		1		1	3	1	
1987	5		3		2		4	9	2	6
1988	9		2				2	7	3	3
1989	9			2			2	1		2
1990	6		3	1	1	2		3	3	2
1991	12		1	2				5	6	5
1992				1				2	11	
1993	3								12	3
1994	1								7	4
1995	5					1		1	3	
1996	6			2					5	1
1997	1			1						
년도미상							4			
합계	70	1	11	14	2	5	84	44	55	26

□ 계층별로 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산화 형태 분석

	노동자	학생	농민	빈민	시민	제야	군경	장기수
분신	37	25		2	2	3	1	0101
할복		1						1101
투신	4	6					1	0701
타살	4	5	1	4	1			0701
음독		1	1					0701
목매	1	1		1			1	1
옥사		1				1		83
의문사	8	8		1		5	22	0601
병사	21	4	1			11		17
사고사	14	7	2			2		0801

인력 자료실	
번호	72
날짜	B12-5

##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9월 14일 ~ 9월 19일)

이 땅 민중들의 삶이 절망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는 열사들의 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이 절망을 벗어나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개인의 이익을 구하기 보다 우리 모두를 사랑했던 열사들의 정신을 가슴에 받아안은 것입니다.  
열사·희생자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에 웃음을 머미고 함께 합시다.

• 아래의 행사는 8월 31일까지 접수된 내용입니다.

#### 서울에서

- 제3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선포식  
• 때 : 9월 14일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 호칭 그릇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 때 :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 민족민주열사 극락 왕생을 위한 천도제  
• 9월 18일 • 장소 : 조계사
- 제9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사업회 준비위원회 재건 선포식  
• 때 : 9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 서대문 독립공원
- 열사의 거리  
• 전태일 거리 문화제  
• 때 : 9월 16일 오후 5시 • 장소 : 전태일거리 (동대문운동장 앞)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 때 : 9월 14일 ~ 18일 • 장소 : 성균관대학교 내
- 열사의 거리전  
• 때 : 9월 14일 ~ 19일 • 장소 : 명지대학교 교문 앞

#### 지역에서

- 광주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 때 : 9월 17일 7시 •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 부산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 때 : 9월 14일 ~ 18일 오후 12시 ~ 6시 • 장소 : 부산역광장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때 : 9월 14일 오전 8시 • 장소 : 부산역광장 그릴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양심수 전원석방의 날'  
• 때 : 9월 15일
- '국가보안법철폐의 날' • 때 : 9월 16일
- '안기부 기무사 공안기구 해체의 날' • 때 : 9월 17일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의 날' • 때 : 9월 18일
-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 때 : 9월 18일 • 장소 : 부산대 Mr.Bud

주최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02-921-4092)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98년도 제2차 학/술/회/의

- 일시 : 1998년 9월 1일 (화) 오후 5시
- 장소 : 기독교 회관 2층 강당

#### 주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02-921-4092)

(상임대표 이창복, 문정현, 김상근, 청화, 김 현, 이해동)

#### 주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70번지 연남빌딩 402호 (우) 110-550 (전화) 742-3180 (FAX) 742-3181 (천리안) CHUSA (NOW) 열사정신